

기획
논문

로컬에서 6월항쟁을 다시 보기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김봉국 _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 연구교수

논문요약

이 글은 '6·10민주항쟁'이라는 명칭이 상징하듯, 6월항쟁을 특정 시점을 축으로 (무)의식적으로 기억·기술하려는 인식 틀을 비판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시간의 주도권을 전제한 서구 근대성의 논리를 반복해 항쟁을 바라본 결과이자, 그와 같은 시각을 재생산한다. '6·10', '6·18', '6·26'과 같은 특정 시점에 긴박된 기존의 항쟁사는 시위의 격렬한 양상이나 투쟁의 헌신성을 전경화할 뿐, 항쟁을 추동했던 고유한 '장소'적 문맥과 서로 다른 로컬(local) 주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6월이라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주체와 운동과 지역(local)을 평가하게 되면서, 항쟁의 지분을 둘러싼 서울(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중심과 주변 간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이자 제도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자, 각 지역과 주체가 민주화의 상징적 사건인 6월항쟁을 전유해 '민주주의'라는 상징 자본(symbolic capital)과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양상은 6월항쟁을 최종 귀결로 설정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질적인 공간과 주체와 운동을 재맥락화한 결과였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간적 전회(spatial turn)'로의 시선 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거꾸로 로컬 주체들의 위치와 입장에서 '6월'의 운동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그 구체적 사례로 광주지역 투쟁의 주요 동력이었던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동의 맥락에서 6월항쟁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했다.

■ **주요어:** 서구 근대(성), 공간적 전회, 6월항쟁, 로컬(리티),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1. 들어가며: 6월항쟁사의 공간적 전회

최근 서구 근대(성)의 문제적 양상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정동적 전회(affective turn)’와 ‘공간적 전회(spatial turn)’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그레그 시그워스 2015, 57; 뒤랑·틸만 2015, 146). 이와 같은 학계의 동향은 ‘전회’라는 의미가 집약하고 있듯이 기존 서구 근대성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인식 틀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응시할 것을 강조한다. 주지하듯이 서구 근대성은 감성에 대한 이성의 우월성을, 공간에 대한 시간의 주도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두셀 2019, 16-29). 서구 근대성의 파생물이자 그 생리를 응축한 국민국가 역시 이성과 시간의 우월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그 내부의 다양한 이질적 로컬(local)을 ‘중심-주변’의 위계구조하에 동질화하고자 했다(기든스 1993, 205-232). 그 결과 로컬은 늘 진보와 문명의 선두인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¹⁾

1) 이 글에서는 ‘지방(성)’이라는 용어가 중심과 대립적인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 대신 ‘지역’ 또는 ‘로컬(local)’을 혼용해서 사용한다(김용규 2008, 178). 물론 ‘지역’이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영역을 지시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국 내의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중심-주변'의 시각과 논리는 단순한 지정학적 스케일 차원에서 동질화된 영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와 그 타자인 로컬 또는 변경 사이의 지배 관계만을 한정해서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자연, 이성/감성, 남성/여성, 시간/공간, 중앙/지방 등과 같이 선명한 이분법적 대립 쌍에서 전자가 후자를 포섭 내지는 배제하는 불평등한 인식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중심-주변의 서구 근대 인식론은 '민주주의'와 같이 시민권을 획득한 보편적 가치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에서도 반복되기는 마찬가지다. 가치와 상징 자본이 중심-주변의 공간 배치와 결합하면서, 거꾸로 지역의 위상과 정체성이 특정 가치를 준거로 규정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당위적 가치로 자리 잡았고, 전 국민적 항쟁은 '6·10민주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었다. 이후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중심-주변의 공간 인식과 밀착되어 서울(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정치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노진철 2009, 26).

현재 6월항쟁을 지칭하는 '6·10민주항쟁'이라는 공식 명칭은 항쟁을 6·10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확산된 일련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칭에 공간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항쟁의 전국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특정 시점(기)을 중심으로 항쟁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 예외적이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6월 10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중심에 놓는 것은 항쟁사 서술에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파생시켰다. 무엇보다 특정 시

점에 긴박된 6월항쟁사는 서로 다른 운동의 문맥을 내재한 지역의 특성을 주변화한 경향이 강했다. 사후적으로 6월항쟁을 최종 도달점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실천과 운동을 평가하는 것은, 마치 서구 근대 국가가 인류 문명의 최종 목적지로 자신을 설정한 가운데, 그 발전사를 기준으로 비서구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야만과 미개의 타자로 규정하고 지배를 정당화했던 시각과 이웃해 있다(차크라바르티 2014, 50-60; 모리스스즈키 2006, 26-31). 이와 같이 특정 시점(기)을 축으로 항쟁을 접근할 때 그것을 추동했던 고유한 ‘장소’적 문맥과 주체의 관점은 보이지 않고, ‘6월’이라는 시기와 그때의 표면적 현상만이 전경화된다.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주체와 공간을 인식하게 되면서, ‘6·10’, ‘6·18’, ‘6·26’ 등과 같은 시점과 그 시점에서 발생했던 시위의 열기가 곧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으로 평가되고, 이런 헌신성은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가 인정된 오늘날, 역으로 로컬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유력한 역사적 근거가 된다. 이런 논리의 연쇄작용 속에서 6월항쟁사는 서구 근대(성)의 시각과 논리를 반복하며 ‘민주주의’라는 깃발만을 부각시킨 채, 그 깃발에 담긴 다채로운 지역 운동의 고민, 실천, 정서, 경험, 기억 등을 간과해 왔던 경향이 짙다. 지역의 주체들 역시 항쟁의 신화를 소비하면서, 그 시각과 논리에 예속되어 자신의 실천적 삶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했다.²⁾ 그 결과 약속된 동시다발적 투쟁 일에 참여자 수, 시위 양상, 시

2) 이 글의 분석 대상인 광주지역을 예로 들면, 최근까지도 지역의 6월항쟁사는 지역운동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나 이해 없이 ‘6·10대회’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위의 표면적 양상에 집중해 지역의 운동을 평가하고 있다. 더 문제적인 것인 이와 같은 입장을 무비

민의 호응, 연행 및 부상자 수를 지역별로 비교하고, 그 수량화된 지표를 근거로 타 지역에 비해 '우리'의 항쟁이 더 치열했다는 것을 주장한다.³⁾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주장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정당화하고 정치력을 행

관적으로 수용해 지역 자체적으로 편찬한 6월항쟁사조차도 동일한 역사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6월항쟁 2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한 광주지역의 6월항쟁사 서술부분을 보면, "6·10대회가 끝난 뒤 광주·전남지역은 소강상태로 빠져들었다. (...) 항쟁 초기 광주지역이 이렇게 소강상태를 보인 것은 당시 가두시위의 주력인 학생운동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남대 경우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용봉대동체가 열려 호헌철폐 투쟁에 동참하지 못했고, 조선대도 학내 민주화투쟁 문제로 시위를 벌일 형편이 못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71). 또한 광주·전남지역 자체적으로 지역의 사회운동을 정리한 책자에서는, "광주에서의 시위가 6월 19일 이후에야 가열되었는데, 그 이유가 광주 지역 경찰의 시위 진압 능력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시위의 실질적인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학생운동의 대응 태세가 뒤늦게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 광주지역의 대학들에서는 5월 투쟁 과정에 있어서도 변변한 가두투쟁을 조직해내지 못함으로써 대규모 학생대중의 동원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6월 9일 최루탄에 피격된 광주출신 이한열의 동문들(진흥고)에 의한 총학생회의 시급한 투쟁 촉구, 명동성당 농성 및 부산·전주·대전 등지에서 시위 격화에 자극받은 시민들의 고무된 반응에 영향을 받으면서 6월 16일 이래 총학생회 간부들의 식발, 혈서 등을 통해 학내 대중의 열기를 급속히 고조시키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오승룡 2016, 323-324). 이와 같이 6월항쟁의 시공간을 종착지로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역의 운동을 맥락화하는 것과 서구 근대 문명을 인류 발전의 정점에 놓고 그에 비취 비서구세계를 줄 세우는 것이 인식론상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근대 서구중심주의가 계몽이라는 미명하에 비서구세계를 '역사 없는(history-less) 사회'(모리스-스즈키 2006, 31)로 간주했던 것과 같이, 6월의 신화가 그것을 만들어갔던 지역적 맥락과 사람들을 지워버린 측면은 있지 않은지 묻게 된다. 6월에서 지역을 볼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6월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3) 한 예로, 광주·전남지역 6월항쟁 관련 단체의 자료집에서 1987년 항쟁 당시 일자별로 서울, 부산, 광주의 항쟁 참여자 수를 그래프로 제작한 상황표를 확인할 수 있다(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전남대 6월항쟁동지회 2018, 64).

사하려는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6월항쟁 30주년을 맞아서 대구와 부산에서 발행된 서적에서도 항쟁을 둘러싼 경쟁의 서사는 계속되고 있다(대구참여연대 2017;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17). 광주 역시 지역의 6월항쟁사가 지역 학생운동의 준비 부족이나 이한열 열사(광주 진흥고 동문)의 죽음과 타 지역 시위의 격화에 자극을 받은 피동적 대응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를 표출하며 광주지역 항쟁의 열기를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박세종 2017, 5-6). “수구 꼴통”, “고담 대구”의 오명을 벗고자 대구의 6월항쟁을 소환하는 욕망에서도(대구참여연대 2017, 5-6), 타 지역에 앞서 유독 ‘뜨거웠던’ 부산의 6월을 기록하는 작업에서도, 저평가된 광주의 6월을 바로잡으려는 논의 속에도, 6월이라는 ‘시간’ 설정이 대구와 부산과 광주라는 ‘장소성’을 압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부산지역에서 발생된 책의 제목은 “87년, 부산의 6월은 왜 그토록 뜨거웠을까”이다. 만약 책의 제목을 ‘부산은 그토록 뜨거웠던 6월을 어떻게 만들고 경험했을까’로 바꾸면 어떤가. 6월이라는 시점을 중심에 놓고 부산의 운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의 운동 속에서 6월을 경험한 것으로 사고하면 어떤가. 이런 시각의 전환은 단순하게 6월항쟁의 신화 속에서 로컬의 역할과 입장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선다. 로컬을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항쟁을 최종 목적지로 상정하지도,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재맥락화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로컬의 운동 속에서 6월을 만난 것으로 이야기 될 것이며, 그렇기에 거꾸로 항쟁은 그 이전과는 다른 로컬의 삶과 운동을 만들

어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간을 축으로 항쟁을 접근하고 그 기점에서 운동의 양상과 성격을 포착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항쟁 참여자의 위치와 문맥에서 6월의 시점을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민중항쟁의 풍경이 출현한다. 새로운 공간적 시점에 선다는 것은 역사적 시간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상상하고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항쟁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간 감각과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별다른 긴장 없이 항쟁의 신화와 그것이 가져온 사회 변화의 결과에 주목한 채, 그 신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에 의해 가려진 다양한 기층 운동의 정서, 열망, 흐름, 양상 등을 포착하지 못했다. 특히 6월항쟁 전후 전국적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투쟁의 속도와 리듬, 강도와 주기의 차이를 보였음에도 그 현상만을 조명할 뿐, 지역별 차이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6월항쟁의 우연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우연한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화된 힘과 정서 등에 대해 여전히 적절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은 ‘공간적 전회’가 가져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항쟁 참여자들의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광주라는 로컬의 위치와 시각에서 6월항쟁을 다시 바라본다. 특히 광주지역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의 문맥에서 6월항쟁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6월항쟁을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5월'의 기억과 광주의 학생운동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침체된 민주운동이 다시 활기를 찾은 것은 1983년 말 유화 국면을 맞으면서부터이다. '학원 자율화 조치'를 계기로 학생운동이 부활하기 시작했고, 재야 운동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이 점차 확산되었다. 유화 조치 국면 이전인 1983년 결성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매개로 1984년에는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와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가 만들어졌고, 1985년에 들어서는 2·12 총선의 여파 속에서 양 조직이 통합하여 재야의 단일 연합운동 조직으로서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민통련)이 출범했다. 신군부에 의해 정치권에서 배제되었던 정치인들 역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하여 반독재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정해구 2017, 68-73). 학생운동 역시 1984년 3월 9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서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나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총학생회를 설립해 갔다. 이후 학생운동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운동의 역량과 대중적 기반을 강화시켜 갔다. 하지만 운동 역량의 증대와 비례해서 학생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내부 논쟁은 격화되었고, 계파 간 대립과 갈등의 양상 역시 표면화되었다(이기훈 2017, 152-153; 카치아피카스 2015, 412-417).

특히 1986년 학생운동의 이념 지형과 판도에서 반미주의 노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분화 양상은 가속화되었다. 반미주의 노선의 등장 속에서 1985년에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의 삼민 노선에 머물렀던 학생운동은 1986년에 들어 민족해방을 중시하는 자민투(반미자주화

반과소민주화투쟁위원회) 계열과 민족민주혁명을 강조하는 민민투(반제반과소 민족민주투쟁위원회)로 분화해 갔다. 특히 전자는 당시 반전반핵 투쟁과 전방 입소 반대 투쟁에 집중했다(정해구 2017, 84). 그리고 그 과정에서 4월 28일 서울대 반전반핵투위 위원장 이재호와 자연대 학생회장 김세진이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 입소 결사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도중 분신 사망했다. 반미자주화투쟁의 중요성, 대중과 함께하는 노력,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강조한 자민투 계열의 노선과 방침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고, 1986년 상반기와 여름방학을 거치면서 자민투의 노선은 여러 대학에서 운동권의 주류가 되었다(서중석 2011, 202-212; 이기훈 2017, 162).

1980년대 초반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세력은 5월 항쟁의 여파로 거의 초토화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지역사회 저변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항쟁 직후부터 대학생과 농민운동가를 중심으로 간헐적 저항운동이 시작되었다. 1980년 10월 전남대 학생들이 주도한 ‘김대중 최후진술 유인물 배포 사건’이나 12월 가톨릭농민회 활동가들이 결행한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 등이 그것이다. 5·18 이후 광주지역 저항운동은 무엇보다 항쟁의 직접적 피해자인 유가족과 구속자 가족을 중심으로 완강하게 전개되었다. 1980년 5월 31일 합동장례식 후 삼우제를 맞아 유가족들은 ‘5·18광주의거유족회’를 결성했고, 뒤이어 ‘광주사태구속자가족회’, ‘5·18부상자회’ 등이 창립되었다. 이들 항쟁 참여자 단체들은 경찰과 정보기관의 극심한 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처절하게 펼쳐갔다.

여기에 종교계의 5·18구속자 석방과 진상규명 요구 투쟁, 들불야학을

비롯한 야학운동, 지역문화운동단체들의 예술적 형상화를 통한 5월문화운동 등이 더해지면서 점차 지역의 운동 역량은 재건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 운동 역량의 증대와 조직화를 배경으로 1984년 유화 국면이 조성되자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전청협)와 전남사회운동협의회(전사협) 같은 지역사회 전선운동체가 탄생했다. 이후 광주지역 운동은 이들 전선운동체를 중심으로 각 부문 운동이 상호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1986년 '3·30 개헌 현판식 투쟁',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 조치' 등 정치적 이슈에 공동 대응해 갔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6월을 맞이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40-377).

전남대 학생운동의 경우 5월 항쟁을 주도했던 세력이 검거와 수배로 인해 부재한 상황에서 복적생과 들불야학 및 문화운동 활동가들이 그 빈 자리를 채웠다. 항쟁 직후 전남대 학생운동 내부적으론 항쟁기간 학생운동권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운동을 위해 과학적 운동론을 정립하고 내부 역량 및 조직을 강화하자는 준비론이 지배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하지만 1981년 '9·29시위'와 1982년 10월 박관현 전총학생회장의 옥중 사망에 따른 대규모 투쟁을 거치면서 점차 과학적 운동론에 근거한 실천 투쟁으로 운동 노선이 전환되었다(역사마당 1987/06/09, 15-16). 이후 1984년 학원 자율화 속에서 직선 총학생회 부활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4월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학자추)와 5월 민주회복추진위원회(민회추위)를 거쳐 11월 총학생회장선거를 실시했다. 1985년에 들어 전남대 학생운동 세력은 조직을 대중운동 지도부인 총학생회와 선도적 정치투쟁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위)로 이원화하

고, 4·19 25주년기념 혁명계승제, 5·18 5주기 추모제, 광주 미문화원 점거 농성 투쟁 등을 치열하게 펼쳤다.

하지만 1985년 이후 대학가에 반미 노선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세력 역시 내부의 격렬한 사상 논쟁이 조직적 분열로 이어져 통일적인 대오를 형성하지 못했다. 1986년 전남대 학생운동은 반미 투쟁을 중심에 놓고 민주화 및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신파’와 군사과소정권 타도를 중심에 놓고 민주헌법쟁취를 주장하는 ‘구파’로 분열되었다.⁴⁾ 하지만 지역 운동에 적잖은 부담과 문제를 초래했던 이 분열은 타 지역과 달리 빠르게 수습되었다. 전남대 학생운동은 신·구파 간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1986년 10월경 조직통합을 선언하고, 11월경부터 당시 3학년이었던 84학번을 중심으로 조직지도부를 새롭게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을 대중운동을 담당할 공개적인 학생회와 비공개적인 활동가 조직으로 재편했다. 당시 조직 통합이 진행 중이었고 학생회가 완결적인 구조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공개 합법 조직과 비공개 활동가 조직의 이원화된 구조를 형성했다(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전남대6월동지회 2018, 11).

당시 분열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 비해 쉽게 봉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완으로 남은 1980년 5월의 문제가 여타의 사상적 차이나 논쟁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광주·전남지

4) 인터뷰에서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조직책임자였던 조이권은 전남대 학생운동 내 ‘신파’와 ‘구파’의 분열을 전체 학생운동 노선의 차이로 보면 자민투와 민민투 간의 갈등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설명했다(조이권 2017년 9월 4일 구술 내용).

역 학생들에게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주범으로, 학살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다는 정서가 운동권 내에서 지배적이었다. 5월의 원한과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공감대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현실의 실천 투쟁이 급선무가 되도록 했다(조이권 2019년 6월 전화 인터뷰 내용). 당시 종교계, 노동, 농민, 재야운동에 진출한 선배들 역시 학생운동 내부의 분열상이 전체 지역 운동에 미친 악영향을 우려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다. 운동 선후배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특유의 지연, 학연의 네트워크는 사상과 노선의 차이가 있는 상대라 할지라도 갈등이 극단적 대립관계로 갈 수 없게 했다. ‘한 집 건너면 아는 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관계 속에서 차이는 서로 용인될 수 있었고, 그것을 넘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 정서와 인적 관계망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운동 역량을 결집하고 대중투쟁을 조직해 갔다.

특히 1985년 총학생회 출범 이후 학생회라는 합법적 공간 내 단대 서클과 과 학회 등이 활성화되면서 학생회의 대중적 기반과 운동 역량이 급속하게 신장했다. 이 과정에서 1986년 후반 무렵 전남대 운동조직 내에서는 기존 언더 서클 중심의 반합투쟁이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운동의 방향성을 대중노선으로 전환했다.

1987년 새 학기 들어 전남대 운동조직은 3월 10일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에서 총학생회장 김승남은 “총학생회는 2만 용봉학우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활동을 공개성과 자발성의 원칙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전제 학원의 비민주적 요소 해결의 주체로서 민주집정제 원칙을 확립시켜 사회 제반 모순 척결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전대신문 1987/03/12). ‘전제 학원의 비민주적 요소 해결’을 역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는 학원민주화를 대중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학생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고자 했다. 실제로 3월 19일 제1학생회관에서는 학생인권복지위원회가 ‘인권복지공청회’를 개최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당국에 건의했다(전대신문 1987/03/26). 또 이를 근거로 ‘졸업정원제 폐지, 학사경고제 및 학생징계규정 개정, 실험실습비 공개, 학칙67조 개정, 사대교사 발령 유보자 대책 등 학내 반민주주의적 요소 척결 및 학생 복지를 위한 본부 농성을 전개했다(전대신문 1987/05/07).

이와 함께 총학생회는 전방 입소 교육 문제, 4·19 정신 계승제, 오월제 등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며 대중투쟁을 전개했다. 4월 24일 1차로 전방 입소한 전남대생들이 부대 안에서 ‘양키 용병 거부’를 외치며 분신한 서울대생 고 김세진, 이재호의 추모제를 지내고자 했으나, 이를 불허하자 교육을 거부하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항의해 학생들은 연행 학생 석방, 관련 책임자 공개 사과 및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며 학교본부 농성에 들어갔다(전대신문 1987/05/07). 비슷한 시기에 총학생회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4·19 정신계승제를 개최하고 집회, 학술세미나, 마당극, 연사 초청 강연회, 햇불시위 등을 통해 학내 호헌철폐 및 장기 집권 저지 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전대신문

1987/04/16; 광주일보 1987/04/18). 계승제 2박 3일 동안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들은 “학원민주화와 호헌 결사반대”를 외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전대신문 1987/05/07).

5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5·18 7주년을 맞이하여 오월제가 진행되었다(전대신문 1987/05/14). 오월제 동안 5·18 관련 영상 상영 및 각계 연사 초청 강연회 등 문화행사와 함께 시국 토론회, 수업 거부, 호남학생연합(호남학련)건설준비위원회 발족식 등이 진행되었다(광주일보 1987/05/12). 특히 오월제 기간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5·18 7주기인 18일에는 교내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과 경찰 간에 대규모 공방전이 벌어졌다(전대신문 1987/05/21).

당시 학내의 대규모 정치투쟁을 총학생회와 함께 조직화했던 것은 ‘투위’였다. 1987년 들어 전남대 운동 세력은 학내 민주화 투쟁과 함께 4·19 및 5월 투쟁을 전국적인 정치 투쟁으로 발전시켜 간다는 목적하에, 비공개 조직을 중심으로 3월 17일 총학생회와는 별개의 반합법적인 투쟁위원회인 ‘반외세반독재구국학생투쟁위원회(구학투)’를 교내 5·18광장에서 출범시켰다(전대신문 1987/03/19). 구학투 출범과 함께 1987년 1월 26일 ‘고 박종철 학우 추모제 및 애국세력탄압 폭로 대회’(전대신문 1987/02/26) 이후 계속된 시위는 더욱 고조되었다.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자 구학투는 4·19 및 5월 투쟁의 일정을 앞당겨 4월 13일 오후 5·18광장에서 ‘장기 집권 음모 호헌 분쇄를 위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전대신문 1987/04/16). 이후 구학투는 거의 매일 주야간에 걸쳐 학내 및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5월이

되자 구학투는 광주지역의 가장 중요한 투쟁인 5월 투쟁을 위해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구학투 산하에 '5월학살원흉처단 및 호헌분쇄특별투쟁위원회(오투위)'를 결성하고, 구학투와 오투위 공동으로 5월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5월 18일 격렬한 학내 투쟁 후 투쟁위원회 핵심 인원들이 시내 가두시위를 위해 이동 중 연행되면서 상당한 운동의 역량을 손실했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대 학생운동은 5월 투쟁 이후의 대중투쟁을 곧바로 확대해 가기 어렵게 되었다. 이후 내부 논의를 통해 6월 9일부터 11일 용봉대동제를 운동 대외의 정비와 대중 역량 결집의 장으로 준비할 것을 결의하고, 대동제 이후 재정비된 동력을 바탕으로 6월 16일 이후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 갔다.

이와 같이 광주지역 학생운동 세력은 학원민주화 및 학생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꾀하는 동시에 직면한 정치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의 독자적 투쟁 노선과 일정을 기획하고 실천했다. 반면 전국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전남사회운동협의회(전사협)와 같은 지역 전선운동체는 지역의 각 부문 운동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다. 특히 각 부문 운동이 그 내부의 문제에 몰입되는 것을 탈피해 전국적

5) 5월 19일 열린 '5월 투쟁 중간보고 및 연행학우 석방을 위한 총회'에서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은 '18일까지 1백 20여 명이 연행되고 12명이 구속, 10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전대신문 1987/05/21). 또 "18일에는 오후 5시와 7시께 공용터미널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려 했으나 사전에 오투위원장 최완욱 군(물리 4) 등이 경찰에 연행돼 무산됐다"(전대신문 1987/05/21).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연대 투쟁을 추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6월항쟁 당시 전남국본 사무차장으로 활동한 최평지는, 전사협이 1983년정부처 침체된 지역운동이 활성화되자 지역의 각 부문 운동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는 큰 물줄기로 결합시키고, 기존 명망가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 민중운동에 기초한 지역의 공동전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직되었다고 말한다(최평지, 2017년 6월 23일 구술내용). 결성 이후 전사협은 1986년 3월 30일 광주 YMCA에서 열린 직선제 개헌 추진 현판식 투쟁에 이어, 5월 3일 인천 신민당 개헌 현판식 집회에도 참여했다. 이 무렵 전사협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로 대중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본격적으로 2·7 규탄대회 이후 논의해 오던 도민운동전선의 결성을 추진했다.

전사협은 자신의 가맹단체인 전청협을 통해서 서울 및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있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이를 준비했다. 4·13 조치 이후 5월에 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한다는 계획 아래 광주 재야인사들을 설득하고 전국 단위 모임을 추진했다(최평지 2017년 6월 23일 구술내용). 마침내 광주·전남지역에서 5월 투쟁을 통해 분위기가 고조되자, 5월 18일 망월묘역에서 5·18 7주기 추모제가 끝난 직후 집회를 통해 ‘범도민운동본부 발족선언’을 하였다(광주일보 1987/05/18).

이와 같이 1987년 6월항쟁으로 가기까지 학생운동 세력과 전사협과 같은 사회운동 세력은 전두환 정권 퇴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했지만, 구체적 실현 방도와 활동 궤적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반독재 민주주의라

는 큰 흐름을 공유한 채 연대투쟁을 조직화했지만, 각자가 위치한 자리와 조건 속에서 정세와 운동을 바라보는 입장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들은 학내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대중화라는 과제와 매년 반복되는 4·19 및 5월 투쟁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4·13 호헌 조치와 같은 정치적 현안과 결합해 어떻게 조직해 갈 것인가를 고민했다. 반면 전사협은 지역 내 운동의 공동전선 결성을 일차적 과제로 내세우며 각 부문 운동보다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전국적 단위의 운동과 연결하고자 했다. 그 때문에 세부적인 투쟁의 조직화와 실천방식은 물론 리듬에 있어서도 양자는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사협을 중심으로 한 전선운동 세력 역시 그 내부에서 정세 판단의 차이에 따라 공동전선 결성에 입장을 달리했다. 신한민주당(약칭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일정하게 연계된 세력은 4·13 호헌 조치 이후 사태를 관망하면서 대응하려는 신중론을 보인 반면에, 전남민주주의청년운동연합(이하 전청련)을 중심으로 한 집단은 공동전선의 시급한 발족을 추진했었다. 그 결과 전남국본 결성 초기 신중론의 입장에 섰던 세력은 참여를 하지 않다가 6·10대행진 이후 결합하게 된다.⁶⁾ 1987년 들어 지역

6) 당시 상황에 대해 전남국본 사무차장 최평지는 1987년 초반 “정치권에서는 개헌안의 내용을 놓고 야당 내부부터 혼란이 있었고, 이를 틈타 전두환 군사정권은 급기야 1987년 4월 13일 호헌 조치를 천명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군사정권의 강경노선 천명에 민주화운동 세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강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자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대두하기도 하였다. 광주에서도 민주회복국민운동 전남지부 중심으로 상황을 지켜보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전사협 가입조직을 중심으로 종교지도자, 교수, 학생운동권이 합의해 민주회복 국민운동 측을 제외한 각계각층이 참여하

의 종교계는 물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세력 또한 각기 다른 영역과 문맥 속에서 독자적인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1987년 무렵 광주지역의 운동 대오는 그 내부에 다양한 차이를 내재했다. 이 때문에 종교계, 대학생, 청년, 노동자, 농민운동 세력 등은 자신들이 처한 주·객관적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정체인식과 상황 판단을 가져가면서 서로 다른 투쟁의 흐름을 보였다. 동시에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 운동의 특성을 살려 개별적으로 고투하면서도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및 4·13 호헌 조치 등을 매개로 전두환 정권 퇴진 운동에 공동전선을 형성했다(진실 1987/ 05/23; 전남농민신문 1987/05).

이 공동전선의 형성에 있어서 광주지역의 특이성은 1980년 5·18의 경험과 기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당시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적 투쟁에 5·18이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1980년대 전반기 내내 5월에 대한 부채 의식 속에서 수많은 헌신적 투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5월 투쟁의 진원지였던 광주지역의 분위기는 남달랐다. 지역의 특성상 대학, 사회단체, 노동, 농민, 종교계의 활동가들이 선후배 관계 속에서 일정한 동지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도 소통과 협력을 용이하게 했던 요소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1987년 6월항쟁 전야에서 6월항쟁 기간 내내 광주 시민들의 저항은 ‘호헌 철폐’나 ‘민주 쟁취’라

는 ‘민주헌법쟁취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민주회복 국민회의 측 일부 실무자들도 합류하였다”고 증언했다(최평지 2012, 24-25).

는 정치구호 이전에 5·18 학살자 처벌을 의미했다.

1987년 2월 7일 도청 앞 YMCA에서 개최된 “故 박종철 열사 추모제 및 고문살인 범도민 규탄대회”의 유인물에는 “광주 5적 처단하여 광주시민 권력 회복하자!”라는 슬로건이 게재되었다(1987/02/07). 당시 ‘박종철 고문 치사 진상규명’ 투쟁을 홍보하는 거의 모든 유인물은, 이 사건을 1980년 5월 광주와 결부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곧 5·18 학살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5·18 광주의거 정신 계승하면 민주주의 쟁취된다”(광주·전남6·10항쟁기념사업회 2017, 532)는 기치 역시 1987년의 국면을 1980년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광주 지역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13 호헌 역시 5·18의 맥락 속에서 비판되기는 마찬가지였다.⁷⁾

학생운동 세력의 정세 인식뿐만 아니라, 지역의 종교계 역시 1987년 4·13 호헌 조치를 1980년 5월의 경험 속에서 그 연장선에 있는 사태로 이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⁸⁾ 심지어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조차도 5·18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의미화되기도 했다(진실 1987/04/01). 다시 말해 6월 항쟁 이전부터 대학 운동 세력은 물론 노동계, 농민, 사회단체 등 광주지

7) 당시 ‘5·18 광주민중의거’ 7주년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에게 배포된 한 유인물에는, “전두환의 제2의 광주학살 음모 4·13호헌 조치를 만천하에 알리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결의를 다 집시다”라고 되어 있다(1987/05).

8) 한 기독교 청년활동가는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자 1980년 5월 광주시민이 죽음으로 맞섰던 이유가 민주정부 수립에 있었기에 “제2의 항쟁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활동가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고 증언한다(김상집 2017년 6월 22일 구술 내용).

역 각 부문 운동에서 5·18은 자신의 투쟁을 정당화하는 원천적 경험과 자료로 동원되고 있었다(근로자(호외) 1987/05; 근로자 1987/06/01). 사회의 제반 현실을 1980년 5월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규정하고 해석했던 양상은 그만큼 지역사회가 5·18에 대한 트라우마(trauma)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면서, 5월의 상흔은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운동 세력의 정치·경제·사회적 의제를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매개이기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⁹⁾

실제 광주지역 전선운동 중심에 있던 전사협은 기관지 「광주의 소리」를 통해 “5월은 4·13 호헌 조치 분쇄를 통해 부활한다”는 기치와 함께 7주기 5월 투쟁이 반드시 호헌 분쇄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의 소리 1987/05/25). 5월 23일 자 「광주의 소리」에는 “잊지 말자 80년 5월”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라는 노래 제목과 함께 그 가사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피로 물든 광주 5월을 생각하세요.

잊을 수 없는 5월을 찾아 나도 몰래 금남로를 헤멘답니다.

9) 6월항쟁이 지난 시점에서 광주·전남지역의 항쟁에 대한 평가 역시 5·18 문제의 해결 여부와 관련해서 내려지고 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전남본부가 발행한 유인물에는 “5월 진상 규명 없는 민주화는 허구이다”라는 기치와 함께, “5·18 광주민주항쟁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6·29 조치와 이후 정국 상황을 선거 사기극을 통한 집권 연장 술수로 평가하고 있다(공동전선 1987/08/01).

목 터져라 민주주의 불러보면서 나도 몰래 두 주먹을 불끈 쥐 것은
잇을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5월이 가슴에 남겨진 까닭이겠죠.
아~ 아~ 광주 5월을 생각하세요(광주의 소리 1987/05/2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 6월항쟁 전야인 4월에서 5월까지 광주 지역의 운동은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이 병존하는 가운데,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투쟁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 하나는 서울 및 기타 지역과 연계된 종교계 및 전남사회운동협의회(전사협)와 같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에 대한 투쟁이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지역 내 각 부문 운동 역시 현장의 권익투쟁을 중심으로 전국적 운동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제기된 정치적 사안들에 대응했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지역의 상흔이자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1980년 5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싸움이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의제로 한 전국적 투쟁의 흐름 속으로 광주를 끌어들었다면, 5월 문제는 이 전국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광주 지역만의 독특한 투쟁의 계기와 풍경을 낳았다. 요컨대 이 서로 다른 계기들이 중첩되는 가운데, 광주는 서울은 물론 전국의 운동과 연결되면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투쟁의 리듬과 성격을 보였다.

3. 전남대 학생운동의 6월항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지역의 6월항쟁은 운동의 추진 동기와 맥락 자체가 타 지역과 같으면서도 다른 요소를 내재하고 있었다. 당시 대중 집회에서 뿌려진 유인물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주의 6월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로만 귀결될 수 없는 또 다른 정서가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5·18에 대한 상흔과 한이었다. 투쟁의 시작과 끝이 다른 지역과 달랐던 것도, 투쟁의 리듬과 강도는 물론 그 지속성이 차이를 보였던 것도 1980년 5·18의 문제가 중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그 해결을 일차적 목적으로 상정한 채 투쟁을 조직한 경향이 강했다.

실제 지역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끌었던 전남대 학생운동 세력의 투쟁 방향과 노선은 이를 잘 보여준다. 1987년 전남대 학생운동의 조직 책임자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조이권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저희들이 전대 학생운동에서 봤을 때, 6월항쟁이란 것은 뭐냐면은 짧게는 4월 13일부터 6월 29일 여기까지예요. 그니까 저희들이 당시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4월 19일, 4·19투쟁을 기점으로 해서 5·18로 확대시켜가지고 전국적인 투쟁을 일으키자. 저희들은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했었죠. (...) 근데 4월 13일 호헌발표, 이것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한 10일경부터 상당히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진행했죠. 4월 13일 호헌발표를, 4월 13일 날 기자회견이

예견이 됐는데, 전두환이가 호헌발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개헌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내부 논쟁을 했는데, 우리는 거의 호헌으로 간다.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4월 13일 우리 모든 봉기의 총역량을 동원하자. 그렇게 내부적 결의를 했어요. 그러가지고 4월 12일 날 저녁에 유인물도 짝 만들어놓고, 총학생회나 투쟁위원회 전부 해가지고 이때부터 우리가 결사항전을 하자. 전부 다 해가지고 아침에 발표를 나오자마자부터 4월 13일부터 투쟁에 돌입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최초로 아마 싸움을 했을 거예요(조이권 2017년 9월 4일 구술 내용).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87년 전남대 학생운동 세력에게 있어서 6월항쟁은 사전에 기획된 일련의 투쟁의 흐름 속에서 예상치 않게 등장한 투쟁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계획한 투쟁이 6월항쟁을 그 종착점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5월 투쟁을 계기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전국적 저항을 목표로 했다는 데 있다.¹⁰⁾ 다시 말해 1987년 당시 전남대의 투쟁은 애초 그 계기와 맥락이 5월 투쟁의 전국화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6월항쟁을 중심으로 설정한 타 지역의 흐름과는 상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전남대 학생운동 세력의 투쟁 개시 시점은 물론, 투쟁의 리듬과 강도 역시 타 지역은 물론 지역 내 다른 부문 운동과는 다른 궤적과 질감을 갖게 되었다.

10) 당시 조선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또 다른 증언자 역시 6월의 투쟁을 기존 싸움의 연장선으로 이해했을 뿐 전민항쟁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박현주 2017년 9월 16일 구술 내용).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서 ‘6·10대회’를 전후로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을 때 광주지역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 때 전남대학교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학생축제인 ‘용봉대동제’를 진행했다. 전국적 항쟁의 흐름과는 엇박자이지만 전남대 학생운동 세력의 투쟁 맥락에서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새해 초부터 시작된 투쟁에다 4·13 호헌 조치로 확대된 투쟁이 5월 말까지 50일 정도 지속되는 동안 시위 도중 연행된 학생들로 인해 운동 역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들은 연일 계속된 투쟁으로 지쳐 있던 시점이었다. 열린 대중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열을 재정비하기로 한 조직적 판단에 의해 전남대 학생운동 세력은 대동제에 집중했다. 이후 전남대는 6월 15일 비상학생총회를 거쳐 16일부터 대중투쟁을 재차 전개해 갔다. 이렇게 재점화된 투쟁은 타 지역의 투쟁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던 19일 이후 광주지역의 대규모 민중항쟁으로 이어졌고, 6월 26일에는 도청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내에 전국 최대 인파가 집결하는 시위가 발생했다(광주일보 1987/06/27).

당시 상황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이었던 고병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 6월항쟁 국면에 이르는 전국적 투쟁을 보면 타 지역, 특히 서울지역과 전대(광주)의 투쟁 흐름은 최고조에 이르는 과정과 시기가 차이가 있었다. 전남대는 내부적으로 4월 호헌철폐 투쟁과 5월 투쟁에 총력(철야 농성, 단식 투쟁, 본부 점거 투쟁, 5월 7일~27일 전 기간에 걸쳐 진행된 투쟁, 오투위 전원 체포)을

다하면서 조직적 손실에 따른 조직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서울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투쟁이 진행되었던 6·10대회 전후시기에 전남대의 경우 총학생회의 대동제가 배치되면서, 물론 대동제 기간에도 자체 투쟁을 조직하고 6월투쟁에 적극 결합하였지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정치투쟁 국면을 조성하여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광주지역 사정은 서울 등 여타의 지역과 다르게 전남대를 제외하면 대규모 시민투쟁을 추동할 학생운동조직(조선대의 경우 학내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학원 민주화투쟁에 총력하고 있었음)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역의 조직과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가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만, 경찰력을 뚫고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시민들의 광범위한 투쟁 참여를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다(고병용 구술 내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전남대6월동지회 2018, 73-74 재인용).

투쟁의 계기와 과정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6월항쟁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역시 타 지역과는 다른 성격을 보였다. 광주지역민들에게 6월항쟁은 1차적으로 5·18 학살자를 처벌하고 망자들의 염원을 실현할 계기로 생각되었다. 그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구호가 타 지역과 같으면서도 그 이면에 깔린 정서는 사뭇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시위의 완강함이나 지속력 역시 차이를 보였다. ‘6·10대회’로 투쟁이 고조될 당시 진행된 전남대 대동제의 기치는 “민족전대! 망월의 눈빛으로 반도의 어둠을 불사르리!”였다(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전남대6월동지회 2018, 383). 당시 광주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두환 정권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넘어, 근원적으로 1980년 5월 학살의 경험으로 신체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니까 지금 6월항쟁이 광주같이 끈질기게 한 데가 없죠? 내가 보니까, 끝까지 한 데가 드물드라고. 당시에 저희들이 6월항쟁을 봤을 때, 서울은 인권적, 도의적 차원의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저희들은 군부독재 퇴진, 5월 학살 원흉 척결 이런 문제로 6월항쟁을 받아들이고 계속 참가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도 그러고 구호도 그러고. 뭐야 전두환이 물러가라, 이것이 1번이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군부독재 타도하자, 이거. 호헌 철폐 독재 타도도 상당히 많이, 지금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 쟁취, 이런 것이 주요 구호였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근데 좌우간 광주는 광주 학살 원흉 전두환 처단하자, 군부독재 퇴진하라, 좌우간 전두환 퇴진 이런 구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 버려요. 광주 학살 뭐 또, 중간에 배후 조종 미국은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 그 동안에 87년, 80년 5·18부터 87년 6월항쟁까지 거의 한 7년 동안인데, 계속 5월만 되면 싸워왔잖아요. 싸워왔는데 계속 막혔죠. (...)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이 한이 맺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5월 그 항쟁의 해결의 기점, 이런 문제로 보지 않았느냐, 다른 지역하고 달리(조인권 2017년 9월 4일 구술 내용).

시위 양상이나 시민의 참여 역시 5·18의 경험 속에서 비교 대조되어 인식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방송 차량을 통한 시내 선전활동이나 퇴근

후 저녁 무렵에 시내 주요 상황(투쟁)의 발생지로 습관처럼 모이는 시위문 화와 풍경 등은 1980년 5월과 오버랩(overlap)되어 기억되고 있었다. 특히 항쟁 당시 치열한 거리 시위의 양상은 5·18의 회상을 거쳐 해석되었다.

좌우간 (6월)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싸움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보면은 싸움이 좀 재밌었죠. 수월하고. 그때, 제가 5·18 그때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80년 5·18때도 보면은 시민들이 공수부대들 달라들어 도 시민들이 안 물러서니까. 애들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 달라 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공수부대들이 쉽게 못 죽이는 거죠. 총검 착용해 갖고 달라들(지) 못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진압을 엄두를 못 냈다고 봐야죠. 5·18하고 비슷했어요.

(...) 당시에 시모라고 있어요. 시모라고, 시민 자발적인 전투모임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병거지 모자 쓰고, 시모 대장이 병거지 모자 쓰고,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나 됐을 거예요. 다부지고. 그래갖고 그 주위로 한 10여 명이 시모야 시모야 그러면 딱 시모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도 상당히 전투력이, 화염병을 네 개씩 차고. 물어보면 직업도 없고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나이가 한 20대 초반 10대 말. 5·18 때도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돌아가시고 그런 거시기였는데, 그때도 보면 상당히 그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게 열성적으로 싸우고 막하고(조이권 2017년 9월 4일 구술 내용).

고교시절 전대사대부고를 다니며 바로 옆 전남대 교정과 시내에서 벌어진 5·18의 참상을 목격한 증언자에게 6월항쟁은 늘 5·18의 경험과 기

역을 거쳐 인식되고 있다. 6월 16일 이후 대중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폭력시위에서 비폭력 연좌시위로 전술을 바꾼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에서도, 학생과 시민들 간에 연대의 정서와 끈끈한 결속에서도, ‘시모(시민 자발적인 전투모임)’로 상징되는 도시 하층의 롬펜 프롤레타리아의 저항도, 모두 1980년 5·18과의 비교 속에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이 1987년 6월은 광주지역민들에게 1980년 5월과의 대화 속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증언자에게 6월항쟁이 5·18의 잔상이나 연장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 6월의 전민항쟁은 5·18의 싸움과는 이질적인 사태로 인식되기도 했다. 투쟁이 고조되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자 계엄령에 대한 유언비어가 확산되어 갔다. 5·18학살의 경험을 새긴 증언자에게도 계엄령은 공포로 다가섰다.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국민운동본부의 상층과 종교계가 위축되고 있었고, 학내에서도 5·18을 경험한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에게 6월은 5·18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으로 보였다.

그래서 실제로 싸움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뭐냐면 자연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사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다시 5월, 또 전국적인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광주가 고립됐잖아요. 그런 부분.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정세 판단을 했을 때는 계엄령이 선포되기 힘들거니와 선포되더라도 한 번 붙어볼 만하다. (...) 절대 이것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조이권 2017년 9월 4일 구술 내용).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증언자에게 1987년 4월에 시작되어 6월 전민항쟁으로 이어졌던 투쟁은 1980년 5월 광주와는 다른 사태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5월 항쟁과 달리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신문과 매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의 시위 상황은 물론 외신까지 연일 보도하고 있었다(광주일보 1987/06/20; 1987/06/23; 1987/06/24; 1987/06/26). 그 때문에 고립된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투쟁 상황과 정세에 대한 인식이 가능했고, 이에 근거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 역시 가질 수 있었다. 이렇듯 광주의 지역민들에게 1987년 6월은 1980년 5월과 닮은 듯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었다. 즉 1987년 광주의 6월은 1980년 5월의 경험이 파생한 정서와 문화를 내재한 가운데서도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공감과 연대의 장을 형성하고, 닮으면서도 이질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1987년 6월의 '민주주의'라는 깃발은 1980년 5월과는 달리 다양한 기층 민중의 생존권 투쟁의 목소리를 새긴 것이었다. 다시 말해 6월항쟁이 군부독재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집단과 주체의 현실적 삶과 생활의 이해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항쟁 기간 내내 외쳤던 '민주주의'라는 기표는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이 억압하고 있던 기층 지역민의 다양한 사회변화의 열망을 내재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통일된 구호가 함축한 변화의 계기와 지향은 다층적이며 복수적이었다. 실제 1987년 6월항쟁 직후 7월과 8월에 걸쳐 일어

난 '노동자 대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무렵 대학생, 노동자, 농민, 청년운동 세력 등은 자신의 삶의 현장과 직결해서 전두환 정권을 인식하고 비판했다. 삶의 현장이 곧 전두환 정권과 직결되어 규정되거나 해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을 바꾸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곧 정권타도투쟁으로 확장·발전되었다.

한 사례로 전남대학교와 함께 광주지역의 또 다른 주요 대학인 조선대학교 학생운동 세력은 학내의 억압 구조를 전두환 정권의 폭압성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학내 문제와 정치 투쟁을 결합시켜 갔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성이나 억압적인 상황이 조선대학교하고 똑같아요. 조선대학교도 그만큼 박철웅 체제가 공고했고, 폭압적이고 억압적이었거든요. 이게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나 학교에서 느끼나 똑같아요. 조선대학교나. 그 때문에 그것이 딱 구별해서 사회문제하고 학교 문제가 구별돼서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치투쟁을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학내민주화 투쟁에 모든 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박현주 2017년 9월 16일 구술 내용).

6월항쟁 직전까지도 박철웅 총장 체제에 맞서 학원민주화 투쟁을 펼쳐왔던 조선대 학생운동 세력에게는 정치투쟁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학원민주화가 일차적 목표로 설정된 상태였다. 그 결과 1987년 전반기 학원민주화 투쟁에 집중한 상황에서 조선대의 정치투쟁은 일부 활동가들이 전남대와의 연합 투쟁에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 분위

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6월항쟁을 거치면서 대중 투쟁을 조직화해 내고, 그 과정에서 강화된 학생운동 대오를 토대로 조선대학교 학생운동은 학원민주화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렇다고 광주 6월항쟁이 전국적 항쟁과는 달리 개별적이거나 폐쇄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광주는 1980년 5월 이후 광주 학살의 진상이 점차 알려지면서 민주주의의 성지로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매년 5월 수많은 타 지역 대학생과 사회 활동가들이 망월동을 참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대의 고리들이 형성되었다. 1987년 6월항쟁 무렵에는 전사협과 같은 전선운동체는 물론 종교계, 노동자, 농민 등 각 부문 운동 세력 역시 전국 단위 운동과 연관 관계를 통해 서울 및 타 지역의 투쟁 상황을 공유하면서 통일된 구호 및 동시다발적 투쟁을 만들어갔다. 1980년 5월과 달리 광주만의 고립된 국지적 투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서울 및 타지의 시위전술을 학습해 투쟁 현장에서 활용하기도 했다. 당시의 상황을 조이권은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움을 한 것을 반성을 했죠. 최루탄을 쏘고 가서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이나 이쪽 전체 흐름을 보니까, 이것이 근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고, 대중들이 결속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갈 각오를 하고 연좌연와시위를 하자. 비폭력 연좌연와시위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아, 그랬는데 16일 날 가서 해보니까, 그때 우수 4, 5천 명이면 이렇게 4,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경찰이 풀어줄 정도가 됐으니까. 아 이것 괜찮다. 우리가 좌우간 시민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 첫날 우체국 사거리 그랜드호텔 앞에, 그때도 17, 8명 좌우간 연행이 됐죠. 그 다음날 대부분 풀려나왔는데, 그러면서 시민들이 달라든 거죠. 그니까 처음에 할 때 보면은 옆에 시민인지, 사복경찰인지 몰라요. 근게 누워 있자마자 잡혀가는 거죠. 같이 서 있다가 누울라 하면 잡아가고, 전부 이렇게 막. 완전히 그러면서 못 잡아가게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됐죠. 그래서 끌려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시민들이 달라붙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조이권 2017년 9월 4일 구술 내용).

실제 연좌연와시위는 항쟁 기간 주요한 투쟁 방식으로 채택되어 학생과 시민들 간에 연대의 끈을 강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한 예로 광주일보 는 6월 18일 광주시내의 시위 양상을 전하는 기사에서 “최루탄 추방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제일극장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과 시민들이 경찰이 최루탄을 쏘자 대부분 땅바닥에 눕거나 그대로 주저앉고 있다”는 캡션(caption)과 함께 연좌시위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그림 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 광주지역 전남대 학생운동의 문맥에서 ‘6·10’이라는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광주의 6월항쟁은 서울(중앙)이나 타 지역의 그것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나름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 그리고 그것이 낳은 아비투스(habitus)와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s)를 내재하고 있었다. 그 결과 타 지역과 연대하면서도 독특한 투쟁의 계기와 리듬 속에서 항쟁을 만들어갔다. 그렇다고 광주라는 지역 역시 균질하고 단일한 운동대오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지

〈그림 1〉



자료: 광주일보 1987/06/19

역 내부에 각기 다른 부문 운동은 자신들이 처한 주·객관적 조건 속에서 독자적인 정세 판단 및 투쟁 방침을 정리했다. 이 서로 다른 계기와 운동의 결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 조치, 5·18 투쟁을 계기로 접속하고 연대하면서, 동시에 서울 및 타 지역의 운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전민 항쟁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4. 나가며: 로컬에서 바라본 6월항쟁

광주라는 ‘장소’ 그리고 그 지역민의 정서와 실천 활동을 통해서 본 1987년 6월항쟁의 풍경은 다른 지역과 닮아 있으면서도 다른 문맥과 질감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투쟁의 계기, 확산 과정, 시위의 양상뿐만 아니라, 항쟁을 인식하고 참여한 지역민의 사고구조 역시 차이를 내재했다. 1980년 5월의 경험과 기억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던 광주가 맞이한 6월은 원초적으로 5월의 반복이자 극복의 문제로 다가왔다. 5월이 새겨진 신체에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의 구호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의 처벌을 위한 마중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곤 했다. 학생,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생존권 싸움이나 권익투쟁은 물론, 그것을 억압하는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 역시 5월의 이름으로 해석되고 정당화되기 십상이었다.

이 글은 광주지역 전남대 학생운동 세력의 6월항쟁 경험을 뒤따라가는 것을 통해 ‘6·10민주항쟁’이라는 특정 ‘시점(간)’을 중심으로 구축된 항쟁사의 서사를 벗어나고자 했다. 대신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정서를 내포한 로컬의 위치와 관점에서 항쟁의 양상과 성격을 재인식하고자 했다. 인류학자 월터 D. 미놀로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뒤집어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존재한다(I am where I think)”라고 했다(미놀로 2018, 193). 그의 말처럼 나의 위치가 세계를 응시하는 시각과 관점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에 대한 물음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자의 시선을 준거로 나의 위치와 입장을 해석한 식민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같은 의미

에서 6월항쟁사 역시 다양한 계기와 문맥을 가진 주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항쟁의 다채로운 경험과 기억을 기입할 수 있게 재맥락화될 필요가 있다.

어느덧 6월항쟁도 서른 해를 넘겨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기념의 대상이 되었다. 외견상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와 그 상징적 사건으로서 6월항쟁의 입지는 굳건해 보인다. 하지만 '촛불혁명'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분단 질서와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강고하게 작동되는 가운데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저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도화된 6월항쟁이 그 본연의 운동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새롭게 기억하고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6월항쟁을 과거의 신화로 기념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열어갈 소중한 원천 자원으로 재인식하기 위해서는, 6월이라는 시점이 아닌 그 6월을 치열하게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실천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쟁의 역동적인 힘과 다양하게 분출했던 민중의 지향을 포착하고 현재적으로 전유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체들의 위치에서 항쟁을 다시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 다채로운 문맥은 과거 항쟁의 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를 갱신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지향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다~~

참고문헌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월항쟁을 기록하다』 4.
-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2017. 『87 광주전남 6월항쟁(자료집)』 II.
-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전남대6월동지회. 2018. 『아! 다시 부르는 청춘의 노래(자료집)』.
- 그레그, 멜리사·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2015. 『정동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서울: 갈무리.
- 기든슨, 앤서니. 1993. 『민족국가와 폭력』. 진덕규 옮김. 서울: 삼지원.
- 김용규. 2008.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한국민족문화』 32. 1-39.
- 노진철. 2009. “영남에서 본 5·18: 국가권력에 의한 배제.” 조희연·정호기 엮음.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서울: 한울. 17-44.
- 대구참여연대 엮음. 2017. 『1987. 6. 대구, 6월의 합성과 미래의 목소리』. 서울: 삶창.
- 되링, 외르크·트리스탄 탈단 엮음. 2015. 『공간적 전회』. 이기숙 옮김. 서울: 심산.
- 두셀, 엔리케. 2019. 『1492년 타자의 은폐』, 박병규 옮김. 서울: 그린비.
- 모리스·스즈키, 테사.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임성모 옮김. 서울: 산처럼.
- 미놀로, 월터 D. 2018.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김영주·배윤기·하상복 옮김. 서울: 현암사.
- 박세중. 2017. “민족전대 6월 민주항쟁사.” 『6월항쟁 30주년과 전남대 학생운동: 민족전대 6월 민주항쟁사(자료집)』. 5-32.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17. 『87년, 부산의 6월은 왜 그토록 뜨거웠을까』. 서울: 선인.
- 서중석. 2011. 『6월항쟁: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서울: 돌베개.
- 오승룡. 2016. 『민주장정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민주화운동』 5.
- 이기훈. 2017. “학생운동의 발전과 6월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6월 민주항쟁』. 한울아카데미. 139-170.
- 정해구. 2017. “1980년대 재야세력의 성장과 역할: 민통련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6월 민주항쟁』. 한울아카데미. 63-103.
- 카치아피카스, 조지. 2015. 『한국의 민중봉기』. 원영수 옮김. 서울: 오월의봄.
- 차크라바르티, 디페시. 2014. 『유럽을 지방화하기』, 김택현·안준범 옮김. 서울: 그린비.

최평지. 2012. "87년 6월항쟁의 성과와 한계."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준) 편.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창립 및 6월항쟁 25주년 기념 1차 토론회(자료집)』. 19-31.

구술자료

최평지 구술증언(2017/06/23)

김상집 구술증언(2017/06/22)

조이권 구술증언(2017/09/04; 2019/06)

고병용 구술증언(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전남대6월동지회, 2018 재인용)

박현주 구술증언(2017/09/16)

유인물

1987/02/07. "故 박종철열사 추모제 및 고문살인 범도민 규탄대회."

1987/05. "모이자 도청 앞으로!!"

신문자료

공동전선. 1987/08/01. "5월 진상 규명 없는 민주화는 허구이다."

광주의 소리. 1987/05/23. "애국청년의 힘으로 헌법과 정부를!"

광주의 소리. 1987/05/25. "5월은 4·13호헌조치 분쇄를 통해 부활한다."

광주일보. 1987/04/18. "전국 40개대 1만5천여 명 시위."

_____. 1987/05/12. "전남대 5월제 전야제."

_____. 1987/05/18. "민주헌법쟁취운동본부 발족."

_____. 1987/06/19. "광주학생·시민 등 비폭력 시위."

_____. 1987/06/20. "서울대도서관점거 철야 농성."

_____. 1987/06/23. "부산 가두시위 소강 상태."

_____. 1987/06/24. "한국 사태 현지 파악 등 목적."

_____. 1987/06/26. "한국 민주화 촉구 결의안 통과."

_____. 1987/06/27. "광주 수만 명 금남로 메워."

근로자(호외). 1987/05. "5월 18일 광주민중의거 7주년을 맞이하여."

- 근로자. 1987/06/01. “누가 박군을 고문살해하였는가.”
- 역사마당. 1987/06/09. “운동사적으로 조명해본 전대의 역사.”
- 전남농민신문. 1987/05.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농민들의 합성.”
- 전대신문. 1987/02/26. “고 박종철학우 추모제가져.”
- _____. 1987/03/12. “87 총학생·총여학생회 출범식.”
- _____. 1987/03/19. “17일 「구학투」 출정식.”
- _____. 1987/03/26. “공청회 내용 학교측에 건의.”
- _____. 1987/04/16. “총학·구학투 주최 1,2차 학생비상총회 신호현론 주제토론 교내시위도.”
- _____. 1987/04/16. “4·19정신 계승제 총학주최 15일부터 17일까지.”
- _____. 1987/05/07. “학교측 해결답변 듣고 농성 풀어.”
- _____. 1987/05/07. “연행학생 전원 풀려나 농성 해제.”
- _____. 1987/05/07. “4·19정신계승제 마쳐 행사기간 학생회간부 단식농성.”
- _____. 1987/05/14. “「오월제」로 뜨거운 용봉대.”
- _____. 1987/05/21. “「5·18 제7주기」추모 2천여 학생 계승제 가져.”
- _____. 1987/05/21. “5월시위 중간보고.”
- _____. 1987/05/21. “1백20여 학생연행 가두시위 중.”
- 진실. 1987/04/01. “서광택시 4일간의 처절한 단식농성.”
- 진실. 1987/05/23. “한국노총은 어용노총.”

Revisiting The Democratic Struggle in June from the Lo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Students' Movem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im, Bong Guk

Institute of Honam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This paper criticizes the frame of perception (un)consciously imposed on the Democratic Struggle in June to remember or describe the event centering on a certain axis of time, as the name “Democratic Struggle in June” suggests. This frame of perception is born from the repeated application of the logic of western modernity, which assumes the preemption of time over space, in the examination of the uprising, leading to the reproduction of this specific perspective. Existing histories of the people’s democratic struggle tied-up with certain points of time, such as ‘June 10’, ‘June 18’, or ‘June 26,’ only draw a landscape of fierce conflicts or the devotion of democracy fighters. As such, they fail to provide and interpret the unique context of the spatial locality and the emotions and experiences of the diverse local agents involved in the struggles. Moreover, the time-oriented assessment of the agents, activities, and locality of the Democratic Struggle in June led to the competition or conflicts between the center (Seoul) and local, between local regions, and between the center and peripheries, over their shares in the democratic struggle. That is, the agents and localities clashed in the attempt to gain exclusively the symbolic capit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democracy provided by the involvement in the Democratic Struggle in June, a symbolic event of democracy, as democracy became consolidated as a universal value and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Conclusively, these aspects arose from the re-contextualization of heterogeneous spaces, agents, and movements towards the final end which was set as the Democratic Struggle in June. Thus, this research argues for the need to shift the perspective to a 'spatial turn' and to revisit the Democratic Struggle in June from the respective viewpoints of its local agents.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sits and reorganizes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the students' movem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hich comprised the key motive power of the Democratic Struggle in June in the area of Gwangju City.

■ **Keywords:** Western Modernity, Spatial Turn, Democratic Struggle in June, Local(ity), Students' Movem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 2020/03/31 심사: 2020/04/21 확정: 2020/05/08